

이해찬 “파업 일삼는 의원 패널티줘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의 내분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역시 정치에 맞서 우리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태정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하려는 것이 국민 염원이다. 역할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 위해 파업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구하는 게 정말 부끄러워”

“한국당 편식하지 말고 모든 입법활동에 참여해야”

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개의를 한나라당(한국당)의 권리가 아니고 한나라당(한국당)의 의무다”라며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하

면서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호소된다. 편식하면 건강에 해롭다. 상인위를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인위에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 주민소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임기 중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파면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조국 법무장관 카드 현실화되나

野 반발에 정치적 부담도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주부터 교체가 예정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특히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진정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임각된다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고 사법개혁은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최종 결정 되면 그때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검찰 장악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강하게 비판한 전례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한 자리에 있던 인물을 다른 자리에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최근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또 야당은 그동안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의 주범이라고 공격해 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벌써 조 수석의 임각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에서 “민약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각까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文)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 무력화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사실상 보수우파를 완전히 추방시켰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입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자신의 뒤를 이을 대권 주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수석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한 뒤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박지원 “黃·나경원

지도자답게 설득해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반복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이렇게 끌려 다니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 이럴 때는 지도자답게 앞장서서 설득하고 들어가자”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박수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 다음대로 국회를 하려면 자기들끼리 의원총회를 하지 왜 국회를 이야기하느냐”라며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들어와서 싸우든 따지든 사활을 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무슨 재협상을 하냐. 그러려면 왜 협상에 나오고 사명을 했느냐”라며 “패스트트랙 할 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합의한 것이다. 이번 정상화할 때에도 서명하고 합의했다.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제가 볼 때 한국당은 그때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한이 끝나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로는 들어가는 등 상임위로 가는데 결국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이달 말을 넘겨 두 특위를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것인데, 말일 이후에는 (국회에)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건 국민들의, 촛불혁명의 요구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고 특히 황교안 대표에는 굉장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내다본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당, ‘삼척항 귀순’ 국정조사 추진…국방장관 해임안도

“바른미래·평화당도 요구…진상 밝히려는 조사 방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한선박 삼척항 입항 은폐조사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같이 낼 것인지, 따로 낼 것인지 논의해보고 우리 당이 먼저 나가나 함께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된 군부대에서 한국당의 방문을 거부한 것을 두고 ‘저희의 진상을 밝히려는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모두 나서서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 국정원, 국방

부에 이어서 이제 국회 국방위까지 나섰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알리기 싫어서 국방위를 열지 않고 있다”며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된다면서 본인들은 이 진실을 온 세상에 밝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바른미래당이 요구했는데 저희도 같이 추진하겠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은폐를 넘어 조작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군 형법 위반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입·은폐 의혹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에 조금 더 접근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민들은 (북한 선박을) 딱 보는 순간 어마는 위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그 선박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개선장군 같은 모습, 며칠간 바다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며 “용감한 시민이 전화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용감한 시민이 사진 찍지 않았으면 영영 불멸 수밖에 없었을 사건이었다”고 했다.

김성한 의원은 “사건 당일 15일 오전 함창 지법법원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정보작전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 관련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15일 저녁에는 합참에서 직접 삼척에 방문했는데 17일 언론보도에서는 ‘표류다’ ‘해상경계작전에 문제없다’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인 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민의 단순 귀순이라고 했음에도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정원의 합동심문조사가 계속되는 것이 도무지 납득 안 간다”며 “청와대가 (귀순사건에 대해) 은폐조사·축소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사안을 국방부에서 하는 ‘눈치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 국정조사단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저희 당은 국방위원회를 한시라도 빨리 열어서 국회에서 조속히 국방부 상대로 진실규명을 하려 한다. 위원장 맡은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정말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계속 단계별로 은폐되고 감춰진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할 것을, 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거대한 안보게이트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행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